

방미통위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 및 공동제작 협력강화 -

◆ 기 간 : 2026. 4. 21. (화) ~ 4. 25. (토), 3박 5일

◆ 방문국가 :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2026.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2
1.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식	2
2.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면담	4
3. 문화유산부 장관 면담	12
4. 캐나다 공영방송(CBC) 방문 및 면담	13
III. 첨부자료	18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등 정부기관 면담 등을 통해 공동제작 활성화 및 정책협력 강화

☐ 출장 국가 :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 출장 기간 : '26년 4월 21일(화) ~ 4월 25일(토), 3박 5일

☐ 출 장 단

구분	부 서	직 위	성 명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 민 수
2	국제협력담당관	과 장	엄 정 환
3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이 선 아

☐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4.21(화)	09:35~15:21	■ 이동 (인천 - 토론토 ^{경유} - 오타와) ※ (소요시간) 18h 46m	• 대한항공 KE077 / AC454
4.22(수)	10:30~11:30	■ 한-캐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서명식	• The Fontaine Building
	14:00~15:00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CRTC
	16:30~17:00	■ 문화유산부 장관 면담	• The Justice Building
4.23(목)	10:15	■ 이동 (오타와 - 토론토) ※ (소요시간) 1h 10m	• AC447
	15:00~16:30	■ 캐나다 공영방송(CBC) 방문 및 면담	
4.24(금)	12:30	■ 이동 (토론토 - 인천) ※ (소요시간) 15h	• 대한항공 KE078
4.25(토)	16:30	■ 인천공항 도착	

II. 출장 내용

1. 「한-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식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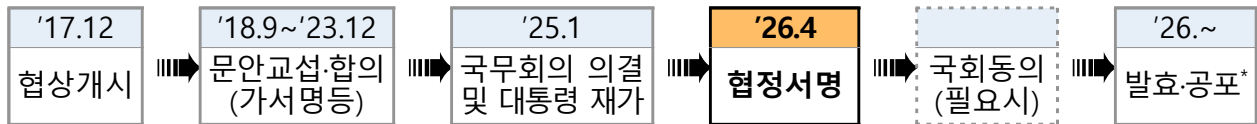
- 일시/장소 : '26.4.22.(수), 10:30 / The Fontaine Building
- 참 석 자
 -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등 대표단 3인
 - (캐나다측) Andrew Brown 차관보(서명권자), Joëlle Montminy 수석차관보 등 문화유산부(PCH), 텔레필름(Telefilm), 캐나다 외교부 등 총 8인
 - (주캐나다대사관) 안영기 공사, 김성열 한국문화원장 등 총 3인

□ 주요 내용

- (방미통위 모두발언) 이번 협정은 양국 시청각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류확대 및 우호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이며 실질적 성과를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지속적 지원 중요
 - (문화유산부 모두발언) 이번 협정은 두 나라 사이 수년 간 대화와 협력의 결실로, 양국 제작자 간 혁신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양국 업계 기대) 양국 모두 영상 콘텐츠 업계와 제작자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으며, 이번 협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음을 공유
- ※ 업계의 높은 기대에 마크밀러 장관은 서명 전날(4.21) 열린 프랑스어권 제작자협회 주최 컨퍼런스 연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협정 서명 소식을 공유하였음

- (서명이후 후속절차) 한국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캐나다는 서명 이후 하원 상정(21일 간), 내각 승인 필요하며, 여름 의회 휴회 기간을 감안할 때, 2026년 가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한-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절차>



※ 서명 후 양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발효(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26.4.30)

-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 이행 담당 행정 기관인 텔레필름* 캐나다로 업무 이관 예정

※ '67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콘텐츠 제작, 배급 지원 및 공식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인증을 담당

- (협정 관련 지원 계획) 양국 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흥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협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협정 체결효과) 텔레필름은 55개 이상의 시청각 공동협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50건 이상 국제공동제작을 추천하고 있음 공동 제작물 인증을 받으면 캐나다 정부의 재정·유통 지원 및 세제혜택 대상이 됨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식 사진



2.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부위원장 면담

□ 개 요

- 일시/장소 : '26.4.22.(수), 13:30 / CRTC
- 참 석 자
 -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등 대표단 3인
 - (캐나다측) Nathalie Th  berge 부위원장, Scott Shortliffe(방송부문 본부장) 등 9인
 - (주캐나다대사관) 김성열 한국문화원장

□ 주요 내용

- (온라인 스트리밍법)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브리핑 후 규제 도입 시 예상 쟁점,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실무적 고려사항 등 정책경험 공유
 - ※ 캐나다는 기존 방송법을 개정해 온라인 스트리머를 방송규제 체계로 편입하고, 매출 2,50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사업자에게 기여금 의무 부과, 라디오 허가 간소화, 국내물 재정의 등 추진
- (국제협력) EU, 영국, 호주 등은 스트리밍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상을 이끌었음. 한국에도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겠음
- (AI 활용) 적절한 표시 등을 전제로 AI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되, 주요 창작 결정과 창의적 통제는 인간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창작자·언론인 단체들도 자체 AI 활용 기준을 마련 중임.

□ 면담사진(CRTC)



⇒ 온라인 스트리밍법 관련 CRTC 발표

○ (개정 현황) '03년 기존 방송법('92)을 개정하는 형태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플랫폼에서 캐나다 콘텐츠의 발견 용이성(discoverability)을 높이는 것이 주요목적

- 규제 실행을 위한 3단계(1단계: 계획 수립 및 공표/2단계: 공청회 및 의견 수렴/3단계: 주요 의사 결정 발령 및 정책 체계 완성) 중 현재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주요 결정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임
- 이미 발표된 주요 결정사항들과 더불어, 향후 몇 달 내에 정책 체계 설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갈 예정

○ (결정 완료 사항)

- ① 등록 및 기본 서비스 제공요건 적용: 캐나다 내 연간 매출 1,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적용
- ② 수수료 기준: 캐나다 내 매출 2,500만 캐나다 달러 미만, 개별 방송사의 경우 200만 달러 미만은 수수료 납부 의무 면제
- ③ 기여금 의무 부과: 캐나다 내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외국계 온라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의 5%를 캐나다 내 특정 기금에 출연해야 함
 - 기여금 규모는 연간 약 2억 캐나다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역 라디오·TV 뉴스 지원, 프랑스어·원주민·취약 집단 콘텐츠 제작 등에 배분될 예정
 - 다만, 현재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연방 항소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로, 기여금이 실제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투입되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그러나 법원 심리 내용을 고려할 때 CRTC측 법적 주장이 우세하며, 해당 규제는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임

- ④ 지역 라디오 지원 기금: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지역 뉴스 제작을 지원하는 임시 기금 조성
- ⑤ 라디오 허가 간소화: 약 7년 주기의 갱신 방식에서 기간 미정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 평상시에는 자율에 맡기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
 - 현재 캐나다에는 상업 라디오 방송국만 800개 이상이며, 고출력이 1,200여개 정도, 전체적으로는 수천 개의 국이 운영되고 있음
- ⑥ '캐나다 콘텐츠(Canadian programming)' 정의 개정(1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캐나다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유연화함
 IP(지식재산권) 100% 캐나다 소유 기준을 완화하여 해외 기업이 IP 과반을 소유하더라도 더 많은 캐나다 창의 인력을 고용하고 창작 주도권을 보장한다면 캐나다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경우에는 캐나다 콘텐츠 인증을 위한 구성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o (추진 예정 사항)

- ① '캐나다 콘텐츠' 정의 개정(2부): 자원 배분 방향과 부담 주체 및 규모를 규정할 것임. 앞서 언급한 스트리밍 업체의 5% 기여금은 최종 기여금이 아닌 기본 기여수준임. 국내 방송사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② 시장 역학 및 지속 가능성: 콘텐츠 발견 용이성(discoverability), 전통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전송 규칙, 스트리밍 플랫폼의 특정 콘텐츠 노출 의무 여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검토 중임. 수 주 내 주요 결정이 발표될 예정임
- ③ 오디오 정책: 라디오와 스트리밍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캐나다 음악을 어떻게 지원할지, 스포티파이·애플·아마존 등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을 검토 중임.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올해 내 의사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주요 사업자별 맞춤형 서비스 조건 수립: 국내방송사 TVA(프랑스어권 민영방송사)나 CTV(영어권 민영방송사)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캐나다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큰 틀 안에서 각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건을 조정할 계획임
- 시장의 영향이 큰 대형사부터 시작해 중견 기업 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2027년까지는 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컨설팅도 이어갈 예정임

○ (규제 도입 시 고려 사항) 기존 방송과 스트리밍은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동일규제 체계 이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음. 서로 다른 규제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캐나다는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두 개의 구분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 시장의 문화, 필요, 관행이 매우 상이하여, 전통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이 복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글로벌 사업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을 활용했는지?

- 실무 차원에서 '개방형 정책'을 유지하며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음
- 글로벌 업체들이 기여금 부과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 정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고 캐나다 시스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라고 밝힘
- 그들은 매우 까다롭고 강경한 협상가로 평가되며, 영국·프랑스의 관계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함. 다만 협상 과정에서는 강하게 대응하더라도 자국 법률과 규정은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단순한 재원 징수가 아니라, 제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겠지만, 결국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스포티파이의 경우도 CRT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이와 다른 사안(데이터 및 AI)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및 CRTC 주도 워킹그룹 참여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음
- o EU·호주·캐나다 등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논의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모두 법적 분쟁을 겪고 있음
- 최근 벨기에 법원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현지 콘텐츠 의무(9%)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이들도 세계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 백악관 현 정부의 입장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도 있음. 그러나 사업자들도 결국 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각국과의 관계를 조정해가며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상 및 논의 과정에서 EU, 영국 등과의 협력이 매우 유용하였음. 일부 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EU에 확인하니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
- 한국이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라며, 가능한 한 정보를 공유하겠음

⇒ 법 개정 이후 하위 규범 마련 시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 o 최우선 과제는 대형 사업자를 먼저 규제하여 기여금을 제도에 유입시켜 그 사용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그들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에 기여해야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자 했음

- 이러한 방향 아래 또 다른 우선과제 중 하나는 프랑스어 콘텐츠의 활성화임. 북미에서 프랑스어는 소수 언어이지만, 캐나다의 프랑스어 시청자층은 특별히 유지·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른 하나는 뉴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임. 방송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뉴스 부문 감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인터넷상의 뉴스 정보는 항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생태계 지원이 주요 우선 과제 중 하나임
- 덧붙이자면, AI와 캐나다 콘텐츠 발전 용의성, 데이터 관리 투명성이 현재 CRTC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과제임
 - '23년 온라인 스트리밍법 도입 이후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지금은 CRTC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AI와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의제로 부상함. 법적·정책적·기술적 차원 모두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나고 있음
 - 콘텐츠 발전 용의성 역시 영어, 원주민어, 프랑스어 콘텐츠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영국과 프랑스에도 공유한 바 있는 관련 심층 보고서를 공유하겠음. 캐나다의 관점에서 발전 용의성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개념이나 방식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는 일부 뉴스에 AI앵커가 활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AI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긍정적인 사례(예: 긴급 경보를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는 데 AI 활용)가 있으나 AI가 사람인 것처럼 제시되는 경우에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임(예: 기상 정보 등에서 실존 방송인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AI 아나운서 활용)
- AI 사용 표기 의무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무엇이 실제 현실이고 무엇이 인공지능인지에 대한 우려를 저희도 공유하고 있으며, "적절한 표기만 이루어진다면 (AI 활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음

- 이 현안들 중 상당수는 현재 여전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중임
- o 시청각 분야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 둔 것이 있음. 캐나다 콘텐츠 정의 현대화 결정에서, 감독 등 주요 창작 직책은 반드시 사람이 맡아야 캐나다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CRTC가 '창의성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했기 때문.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업계의 관행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창의적 통제는 반드시 인간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임. AI 관련 후속 정책 결정은 현재 검토 중임
- o 창작자 조합과 언론인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AI 사용 내부 규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며 큰 지지 기반이 되고 있음
- 캐나다 감독 조합(Director's Guild of Canada), 캐나다 작가 조합(Writer's Guild of Canada), 그리고 캐나다 언론인 협회(CAJ) 등이 넓은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CRTC가 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운용하는지?

- o CRTC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지는 않으나, 기금을 조성할 권한은 갖고 있음. 기금 조성 의사를 먼저 발표한 뒤, 해당 자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들이 있음
- 예를 들어, 지역 라디오 지원 기금의 경우 CRTC가 기금 조성 의향을 공표하고 공개 협의 과정을 거쳐 캐나다방송사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등 민간 기관이 운용 제안을 신청하면, CRTC가 이를 검토하여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외부 조직을 통해 기금을 새로 만들도록 요청하거나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함. '캐나다 미디어 기금'처럼 캐나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기존 체계로 자금을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 콘텐츠 발견 용의성은 편성 쿼터 제도와 유사한 것인지?

- (시행 방법) 시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선례를 유심히 살펴 보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홈페이지에 일정 수 이상의 자국 콘텐츠가 노출되어야 하며, 영국에서는 BBC 등 공영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홈 화면에 노출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잘 보이고 쉽게 찾을 수 있게(prominence and discoverability)하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며, 국내 방송 사들에 적용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도구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음

⇒ 콘텐츠 발견 용의성 관련 한국은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CRTC)

- (한국 사례) 국내 제작물 편성 의무(쿼터제)가 있으나 OTT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률이 없어 규제 비대칭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상황
- OTT도 규율 대상으로 하는 통합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과 동일한 국내 제작물 편성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임
- 캐나다의 다양한 정책 사례가 한국의 플랫폼·콘텐츠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발견 용의성 문제는 문화 정체성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

⇒ 글로벌 사업자 의견 수렴 공청회 절차, 운영방식 등은 어떻게 되는지?

- ①공지 발행 ②이해관계자 의견 서면 접수 ③공개 청문회 개최
- 청문회는 일반에 공개되며 방송·스트리밍됨. 사안에 따라 구술 방식 또는 서면 절차로만 진행되기도 하며, 모든 제출 의견은 공개 기록으로 남겨짐
- 의사 결정은 공개 기록에 기반하며 법원 절차와 유사한 엄격한 적법 절차를 따름. 의견 제출, 개입(intervention), 청문회, 정보 요청(RFI) 및 답변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이는 적법 절차 준수와 결정에 대한 잠재적 도전(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3. 문화유산부 장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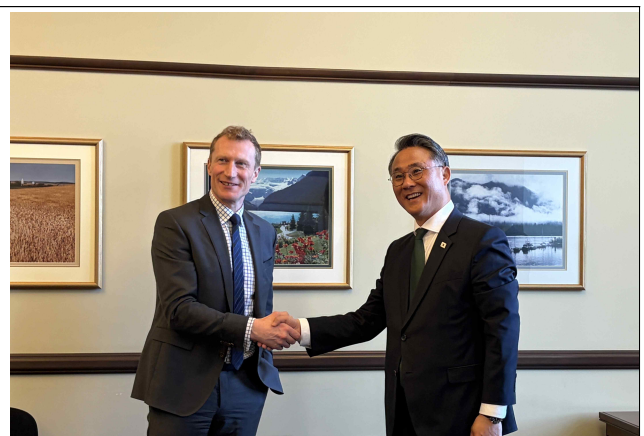
□ 개 요

- 일시/장소 : '26.4.22.(수), 16:30 / The Justice Building
- 참 석 자
 -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등 대표단 3인
 - (캐나다측) Mark Miller 문화유산부 장관, Joelle Montminy 수석차관보 등 5인
 - (주캐나다대사관) 안영기 공사, 김성열 한국문화원장

□ 주요내용

- (공동제작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기반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며, 양국 간 공동제작 활성화로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기반 강화 및 관광·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온라인 유해콘텐츠 대응) '투명성 센터' 설립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등 한국측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 협조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

□ 면담사진(문화유산부)



4. 캐나다 공영방송(CB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개 요

- 일시/장소 : '26.4.23.(목), 15:00 / CBC 본사 회의실
- 참 석 자
 -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등 대표단 3인
 - (캐나다측) Jon Medline 정책·국제협력 본부장 등 6인

□ 주요내용

- (AI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 △정보생태계·가짜뉴스 대응 △저작권·데이터 보호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
 - 온라인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콘텐츠 발견 용이성(discoverability)과 플랫폼 접근성을 공영방송의 주요 과제로 언급
- (AI 활용·딥페이크 대응 관련) 뉴스 분야에 AI 앵커·AI 음성·AI 생성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AI 활용 시 사전 고지 및 인간 검증 절차 필수
 -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메타데이터·자막·생산성 지원 등 보조 업무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

□ 면담 사진(CBC)



⇒ AI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음

- 조직차원에서 AI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음. 첫 번째는 신기술을 활용해 시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책무를 완수할 기회로 보는 것임
 -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주시 중임. 특히 미디어 분야 타 기관들로부터 영감을 얻으며 책임감 있는 AI 도입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정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 미디어는 정보를 생성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청중에게 제공하므로 AI 생성 콘텐츠와 그 활동, 특히 디지털 생태계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영향을 이해하려 노력 중임. 이를 통해 청중이 오보나 소위 '가짜 뉴스'와 진실 사이를 잘 구별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마지막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임. 정보·데이터·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저작권 및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하는 기회와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이 핵심 과제임.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 즉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며, AI가 사용된 경우 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AI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실제 현장적용 및 애로사항이 궁금함

- (운영 현황) 해당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모든 부서가 업무를 수행할 때 따르는 상위 지침임. 인간의 감독을 의무화 하는 가이드 라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가이드라인이 있음

- (뉴스) CBC에는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 뉴스룸이 있으며, 각 조직에 맞는 추가 지침을 발표하였고, 뉴스 콘텐츠 초안 작성이나 저널리즘 프로세스에 생성형 AI 사용은 더 엄격한 제한 사항을 추가
 - 반면, 메타데이터 생성, 헤드라인 옵션 추천 등 기사 작성의 주변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여러 실험을 진행 중이며, 모든 결과물은 발행 전 반드시 사람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야 함
 - 저널리즘 기능 지원 부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컨대 마케팅 부서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할 때도 추가 지침을 따름. 특히 뉴스 관련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 때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음. 기본 가이드라인과 부서별 추가 지침을 연계하여 운영
 - 요약, 분석 보조 등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배포 전 모든 내용을 점검할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
- (엔터테인먼트)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개입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 연구나 생산성 향상 뿐 만 아니라 다국어 버전 제작, 즉 타 언어 자막 제작 등에 다양한 생산성 도구들을 활용할 기회가 많음
 - 이미 많은 편집 및 제작 도구들이 AI 플러그인이나 AI 기능을 탑재한 상태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제공되는 AI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제작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AI 사용 시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임
- (애로 사항) 첫째, 구성원 인식 제고와 교육, 즉 활용역량(리터러시)을 높이는 일임. 전국적으로 5개의 시간대에 걸쳐 여러 지역에 직원이 분포해 있어, 이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인 과제임
 - 둘째, 거버넌스의 확장임. 지금까지 활용 차원의 거버넌스를 운용했으나, 이제는 직접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맞춰 기술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함. 결국 핵심은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임

⇒ AI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

- 내부적으로는 AI를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 정보로 공유하고 있음. 외부 공시 측면에서는 AI가 사용된 경우 시청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동영상에 자동 생성 자막이 적용된 경우 'AI 자동 생성'임을 사전 고지하며, 스피치-투-텍스트(speech-to-text) 방식으로 제작된 기사나 AI 음성 낭독 콘텐츠 역시 AI 활용 사실을 명시함
- 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장면이 등장하는 시점에 AI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에 사용되었는지 명시하고자 함

⇒ AI 생성 영상을 뉴스 및 일반 제작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뉴스) CBC에서 뉴스 분야는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AI 앵커, AI 음성, AI 얼굴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사 작성과 제작 전반에 걸쳐 실제 인간이 담당하고 있음
 - AI는 구글·엑셀처럼 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뉴스의 목소리와 얼굴은 실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다만 AI 자체가 기사의 주제일 경우에는 AI 관련 맥락에서 AI 생성 영상이 등장할 수 있음
 - 뉴스 자료 화면에 AI 생성 영상을 넣는 것 역시 우리 CBC의 관행이 아님. 우리는 콘텐츠 출처 검증을 위한 국제 표준인 C2PA*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함

※ 디지털 콘텐츠 출처, AI 편집·생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제 기술 표준으로 Adobe, Google, MS, Open AI, BBC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논픽션) 다큐멘터리 등 논픽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실제 촬영 대신 AI를 활용할 경우 해당 장면이 AI 생성임을 명시해야 함
 - 수백 개의 외부 독립 제작사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숙지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임
 - 실제로 약 2주 전, 한 제작사가 스트리밍 서비스 썸네일에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내부 팀이 이를 발견하고 제작사에 공개 의무를 고지하였는데,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처럼 가이드라인 인식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어린이) 어린이 관련, AI나 가짜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아이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고 교육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자 함

⇒ 콘텐츠 발견 용이성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전통 TV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발견 용이성 도구들이 있으나, 디지털·스트리밍 공간에서는 이런 도구가 거의 없는 상황
 - CRTC가 조만간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 여부와 정부의 법제 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발견 용이성보다 플랫폼 접근성(access) 자체가 선결 과제를 강조하고 싶음
- 우리 자체 플랫폼에서도 방대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동등하게 어려운 과제임. 제3자 플랫폼에 우리 CBC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

Ⅲ. 첨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0.(월) 배포시점 배포 2026. 4. 20.(월) 14:00

한-캐나다 '드라마·영화' 공동제작 추진

-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위해 캐나다 방문...국제협력 본격화 -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공동제작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방송·미디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25일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통위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각) 캐나다 문화유산부를 방문해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지난 2017년 캐나다와의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국무회의 의결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조속한 협정 체결 필요성을 언급, 이번에 방미통위의 캐나다 방문으로 8년 만에 마침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한-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절차>



※ 서명 후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발효

이번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공식 발효되며, 협정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촬영장비 반입과 제작인력의 양국 출입국 시 편의제공, 정부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양국 제작사는 제작비 공동출자로 인한 비용 분산과 문화교류 활성화, 해외시장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캐나다 미디어 펀드(Canada Media Fund)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공동제작 지원 신청 자격을 동시에 확보, 실질적인 제작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매년 약 3억 9천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4천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중 약 84%가 방송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영화의 경우에는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며 연간 약 1억 4천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450억 원)의 제작 지원 예산 중 마케팅이나 기획 개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제작에는 약 8천만 캐나다 달러(약 810억 원)가 투입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을 통해 공동제작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및 제작 계획 수립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미통위 대표단은 이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를 방문해 양국의 방송 정책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현지시각)에는 캐나다 공영방송(CBC;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을 방문해 공영방송 정책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서비스 미디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 이후 후속 조치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양국 업계에서 오랜 기간 기다린 공동제작 협정에 마침내 서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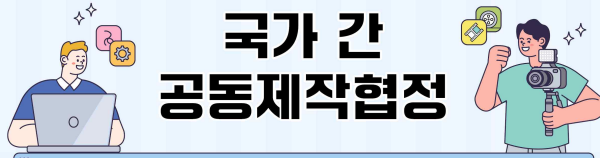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라포르툐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확대되고 있는 창의적·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과 캐나다의 제작자와 창작자들이 협력해 양국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개요 및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엄정환 (02-2110-1331)
		담당자	사무관	이선아 (02-2110-1334)



-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한-캐 FTA('15.1월 발효) 제1.6조(문화협력)제2항을 상기하며,
 - 양질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양 당사자의 시청각 산업의 활력 증진과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정의) “시청각 저작물”은 길이와 형식에 관계없이, 일련의 영상, 또는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진 영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저작물을 말한다.
- (국내 제작물 인정)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을 국내제작물로 간주한다.
- (일시입국 및 체류) 공동제작물을 위하여 고용된 창작 및 기술 인력의 일시적 입국과 체류, 장비 반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재정적 기여)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TV의 경우 15%, 영화 포함 기타는 20%, 다자간 공동제작물(제3국 참여)은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저작권 및 수익) 각 제작자별 재정적 기여에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하고, 협정에 명시된 최소 재정적 기여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분쟁해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협의 및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공동제작협정 개념과 의미



공동제작

국적이 다른 제작자 간에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거나 배분하는 것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FTA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

국제공동제작 방식의 2가지 유형 (제작자 선택)

- ① 자율적 계약 방식: 정부 협정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진행
- ② 국가 간 협정에 따른 방식: 정부 간 명문화한 공식 조약을 근거로 진행
 - 핵심 혜택, 협정 요건을 충족한 공식 공동제작물은 협정 당사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받아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 및 규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공동제작협정 주요 혜택

- 공동제작물 혜택을 국제조약 형태로 공식화
- 국내제작물 지위 부여, 보조금 지원, 세금 면제, 출입국 편의, 장비 무관세 반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협의제를 통해 조속히 해결가능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기대효과



경제적 이익

제작지원 공동출자로 비용 분산 및 각종 편의 제공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제작자의 재원 부담 해소 기여)



해외 시장 확대

상대국 국내제작물 인정으로 배급 청구 확대, 수익 증가 및 인접 제3국 시장 진출 용이



문화 홍보 및 교류

양국의 문화적 전통을 홍보하고 경쟁우위 분야를 결합하여 양질의 국제적 문화상품 제작



제작지원 정책 수혜

양국의 보조금, 세제 혜택 등 국내 제작물 대상 제작지원 정책 동시 수혜 가능



글로벌 역량 강화

상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습득하고 제작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활용

분쟁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의체(공동위원회 등)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공식 활용 가능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추진 배경

- 양국의 시청각 교류 촉진과 상호 증진을 통해 한류의 세계 진출 확산 (경과) '17년 협상 개시, '95년 한-캐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양해각서 현대화 및 범위 확대



적용범위

길이와 형식에 상관없는 양 당사국 제작자의 모든 시청각 저작물



승인 절차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당사국의 승인 필수



재정적 기여

TV 공동제작은 15% 이상, 영화는 20% 이상의 재정적 기여 요구



주요 혜택

당국 승인 시 양국 모두 '국내제작물'로 간주되어 정부 재정지원 등 모든 법적 편의 활용

우리나라 체결 현황 ('26년 4월 기준)

총 체결 규모: 총 39개국(8개 국가 및 2개 지역 공동체)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보도시점 2026. 4. 23.(목) 배포시점 배포 2026. 4. 23.(목) 10:00

“드라마·영화, 캐나다서 촬영하세요”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 협정’ 체결...정부 지원 등 혜택 -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공동제작을 위한 국제 협정이 체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22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 문화유산부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식을 갖고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식에는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과 캐나다 문화유산부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번 서명은 2017년부터 이어진 긴밀한 협의의 결실로, 양국 콘텐츠 산업 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제작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부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차관보는 “이번 협정은 ’24~’25 한-캐나다 문화교류의 해 성과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국 시청각 미디어 산업의 강점과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서명식을 진행하기 앞서 방미통위는 협정문 서명 이후 절차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서명을 마치면 하월에 상정하고 21일간의 계류 기간을 거친 후 내각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준되며, 시기는 대략 올 가을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별한 지원 정책이나 별도 펀드 조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협정 활용 장려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구상과 세부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덧붙여 실무 관리를 담당할 ‘텔레필름 캐나다’에서는 현재 55개 이상의 공동제작 협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50편 이상의 국제 공동제작물을 인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동제작물로 인증받은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국내 제작물로 간주돼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명식을 마치고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내 업체들로부터 언제 협정이 발효돼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캐나다 측에서도 빨리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엄정환 (02-2110-1331)
		담당자	사무관	이선아 (02-2110-1334)



Canada and Republic of Korea sign modernized audiovisual coproduction treaty

Français

NEWS PROVIDED BY

Canadian Heritage →

Apr 22, 2026, 11:30 ET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Republic of Korea jointly sign a modernized audiovisual coproduction treaty that will deepen their strong audiovisual partnership

GATINEAU, QC, April 22, 2026 /CNW/ - Canada has leading expertise in international coproduction, allowing our creative professionals to work with partners worldwide. These collaborations strengthen economic and cultural ties and help us share Canadian sto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oday, the Honourable Marc Miller, Minister of Canadian Identity and Culture and Minister responsible for Official Languages,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Republic of Korea jointly signed a modernized audiovisual coproduction treaty that will deepen their strong audiovisual partnership. Mr. Minsu Ko,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headed the Korean delegation that travelled to Canada for the signing.

Canada and South Korea enjoy thriving cultural relations, marked by a shared commitment to the arts, culture, creativity and innovation. This coproduction treaty will replac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levision coproduction, signed in 1995. This new agreement will make it easier for South Korean and Canadian professionals to collaborate on audiovisual projects. It will introduce a more modern and flexible coproduction framework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industry. It will also expand coproduction opportunities by including film and digital media in its scope.

The treaty is the result of an ambitious joint eff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tinues Canada's efforts to modernize its international coproduction treaties while building on the recent Canadian creative industries trade mission to East Asia. Once ratified and implemented, it will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the Canadian and South Korean audiovisual industries and strengthen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Quotes

"Canadian stories reflect who we are and resonate with audiences around the world. This new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help the Canadian audiovisual sector to establish more partnerships with Korean counterparts and build on the momentum of our recent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deepening cultural and trad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I look forward to seeing Canadian artists and creative businesses bring their talent and creativity to partnerships with Korea in ways that attract investments and support the growth of our creative economy."

--The Honourable Marc Miller, Minister of Canadian Identity and Culture and Minister responsible for Official Languages

"I am confident that this agreement will lay a solid foundation for audiovisual coproduc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serving as a catalyst for industry growth while 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Korea will also continue to support the global expansion of creative and diverse content in partnership with Canada."

--Kim Jong-chul, Chairperson of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Quick Facts

Audiovisual coproduction treaties allow Canadian and foreign producers to pool their creative,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coproduce audiovisual projects that qualify as national content for the purposes of accessing incentives and broadcasting quotas in the partner countries.

Canada has agreements with 59 partner countries and has signed 10 modernized treaties between 2016 and 2024. A complete list of Canada's coproduction treaties is available on Telefilm Canada's website.

In Canada, the ratification process involves tabling the treaty in the House of Commons for a period of 21 consecutive sitting days, followed by the approval of a second Order in Council by the Treasury Board.

Under the Creative Export Strategy, Canadian Heritage, in collaboration with Global Affairs Canada's Trade Commissioner Service, led a successful creative industries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and Japan in June 2025. The mission facilitated 417 curated business-to-business meetings, resulting in commercial agreements either signed or under advanced negotiation, with an estimated total value between \$3.2 million and \$4.15 million.

South Korea is a high potential market for Canadian creative industries, with Canadian exports valued at \$171.9 million in 2023, of which audiovisual exports represented over 40%. Canada is also a strong reciprocal market for South Korea's creative industries, importing \$135.7 million in creative works in 2023.